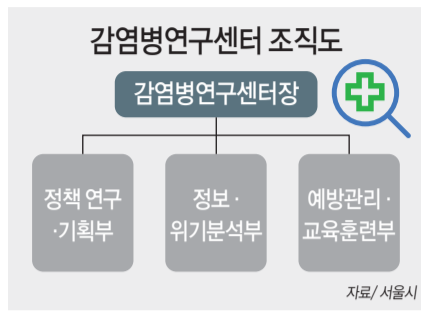


#빅데이터 구축 #대응정책 연구 #상시 모니터링

감염병센터 신설, 市 직접운영

서울시, 공중보건 조직강화

위기관리 위한 국제협력 사업 지원
위기 단계 따라 조직·기능 확대 전환



서울시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서울의료원에 민간위탁해왔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없애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속으로 감염병연구센터를 새롭게 만들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7억5850만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한다.

센터는 평상시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와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결핵·인플루엔자·수인성·매개체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힘을 보탠다.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면 위기 단계에 따라 조직·기능을 확대 전환해 현장

대응에 나서고 국제도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센터는 ▲감염병 정책연구·기획부 ▲감염병 정보·위기분석부 ▲감염병 예방관리·교육훈련부 3부로 구성된다.

정책연구·기획부는 감염병 대응정책을 연구·평가하고 감염병 대응 관리 전략과 표준지침 교육서를 개발한다. 국제협력과 감염병 전문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도 맡아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전파하거나 해외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한다.

정보·위기분석부는 감염병의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를 살피고 유행 시기를 예측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예방관리·교육훈련부는 감염병 대

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분석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지원에 나선다.

부서 인력은 개방형 4급 1명(센터장), 행정 5급 1명, 임기제 5급 2명, 행정 6급 1명, 임기제 7급 6명, 보건연구사 2명 등 총 13명이다.

시는 센터 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내년 34억2050만원, 2022년 6억2200만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억 7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는 7월 중 감염병연구센터 사무공간을 시청사나 서울시립대학교에 확보하고 같은 달 공모를 통해 센터장 등을 선발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은 메가시티로서 과밀화된 인구와 환경으로 도시형 감염성 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 기관이 부재하다”며 “위기상황 시 감염병을 분석·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문 정책 연구실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생존자금 받은 자영업자 92% “도움됐다”

서울시, 두달간 총 140만원 지급
51만명 중 약 39만명에 2732억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초기에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중 92%가 영업 유지에 도움이 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6월 26일 기준으로 약 51만명 중 약 39만명에게 273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초기 신청자 1만명 중 선정돼 지원을 받은 9073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 중 조사에 응한 이는 2713명이다.

사용처를 보면 응답자 중 47% (1265명)는 지원금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고, 재료비(16%, 441명)와 인건비

(10%, 283명)가 그다음이었다.

자영업자의 9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청절차가 간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2%였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에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서류를 내면 된다.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도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에 활용돼 영업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며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이 골목 경제에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글로벌 창업 생태계 20위 ‘쾌거’

서울 창업생태계 가치 47조
글로벌 톱 1위는 실리콘밸리
지식축적 분야서 만점 기록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지능이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에서 ‘서울’이 20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의 평가대상에는 100개국 270개 도시가 포함됐다. 서울은 2017년 평가대상에 처음 올랐고 2019년에 차세대 유망 생태계를 다루는 ‘넥스트 30’에 들어갔으나 톱 30에 안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보고서에서 역시 처음으로 톱 30에 진입한 도시는 15위를 차지했다. 톱 30 신규진입 도시로는 선전(22위), 항저우(28위), 상파울루(30위)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서울 창업생태계의 가치는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

가됐다. 이는 글로벌 톱 5의 40% 수준이다.

보고서가 꼽은 창업생태계 글로벌 톱 5는 1위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였고, 공동 2위는 뉴욕과 런던, 4위는 베이징, 5위는 보스턴이었다.

이 보고서는 서울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의 창업생태계는 총 7개 평가 분야 중 지식축적(Kno

wledge), 시장진출(Market Reach), 생태계활동성(Performance), 인재(Talent)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식축적 분야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연계성(Connectedness), 자금조달(Funding), 지속성장지수(Growth Index)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창업 생태계 내 세부산업 중 강세 분야로는 게임산업(Gaming)과 생명과학 부문(Life Science)이 꼽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의 경제는 혁신에 기반한 기술 스타트업에 달려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검사 전 발열체크 먼저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앞서 체온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주민센터서 한번에

서울시, 내달부터 원스톱서비스

서울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하려는 70세 이상 노인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어 카드를 신청한 뒤 발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내고 서울시의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시는 행정안전부(서울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 교통카드(10만원 상당) 지원 대상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70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 반납은 2018년 1236명에서 지난해 1만6956명으로 14배가량 늘었다. /김현정 기자

목동에 기업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서울시, 기업에 제품 성능시험 등 지원

서울시가 국내 기업의 태양광 신기술을 시험할 실증단지를 서울에너지공사(양천구 목동서로 20)에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옥의 안팎을 활용해 건물 옥상과 벽면, 주차장, 보도·도로 등에 보도블록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다양한 태양광 신기술과 부속장치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신기술 실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성능시험과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테스트 기회를 제공한다.

실증을 마친 뒤에는 서울기술연구원 등 전문가에서 결과를 평가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에 참여할 기업은 내달 17일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

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태양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기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 2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연다.

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태양광 신기술을 최대 30개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실증단지 설계에 들어가 10월 공사를 시작,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실증단지 1단계를 운영하고 실적 등을 점검해 연차별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